

KT 노보보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KT노동조합 / 발행인 이재석 / 편집인 강세홍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길컴(02-2272-7114)



2면-임단협

올해 임단협은 △인사 및 보수규정 개악 철회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연월차 강제부여 금지 △해고자 복직 △복지기금 출연 및 학자금 지원 등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관리자, 직위미부여 효력정지 승소

조합의 인사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긍정적 영향 미칠듯

관리자들이 계약된 인사 및 보수규정에 따른 직위미부여에 불복 '전보발령 및 직위미부여발령의 효력정지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끝에 지난 6월 5일 개정된 인사 및 보수규정에 대한 효력정지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청구취지에 차이점은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가 같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계약된 인사 및 보수규정에 대해 "경영상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감액된 임금만을 지급받게 됨으로 이전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규정하고 "회사가 인사규정 시행 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음에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직위미부여 발령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시행세칙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노동조합이 동의여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보수규정 개정부분과 인사규정 신설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했다.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노사협의 당시 노동조합위원장 이동걸이 동의한 사실이 소명됨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사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은 인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처장에게 노사협의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였을 △노사협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 인사규정이 신설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무처장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데 대한 동의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에 대한 소명없다는 근거를 들어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

고 결론내렸다.

이에 덧붙여 설명, 관행상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위원장이 아닌 노조간부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해왔으며 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변경에 동의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관리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진행한 2,3급 관리자분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조합은 이 소송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 규약 등 미비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 할 것이며, 노사간 신뢰 회복이 급선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강재구(중앙본부 법규국장)

연월차 강제사용 중지하라

현장 불법편법 사례만연... 조합, 책임자 문책 등 강력대처

조합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조직개편과 연월차 강제사용 등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앙상징회의를 통해 실태조사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연월차 강제사용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용사례를 체증 사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사측이 연차휴가 등 복수운용 보완지시를 통해 △연간의 연차휴가일괄신청 승인사례 △인사제제 수단을 동원한 휴가 사용독려 행위 △보건휴가, 월정휴일 미반영사례 △단체휴일부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사에 나서게 됐다.

실태조사 결과 현업은 네스팜 등 상품활동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부터 전략상품을 판매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나 각 기관별 경쟁심리로 인해 개별목표표까지 설정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직원들은 조직개편과 관련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영업국 탄성으로 비영업직에 대한 상품판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품판

매 압력으로 인해 "도대체 조직개편은 왜 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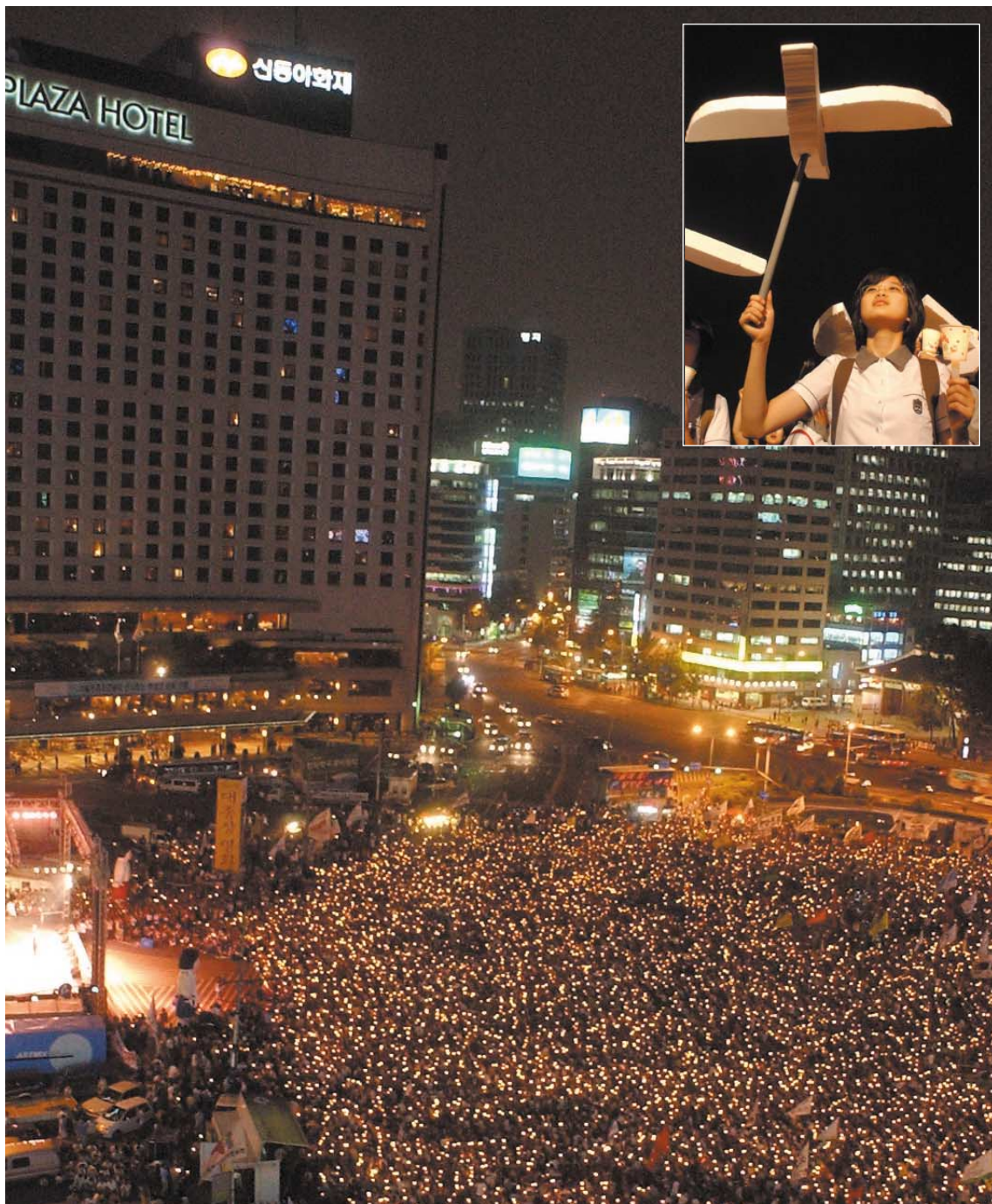
조직개편 이후 인원배치 문제, 관할지역 문제, 업무 분장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팽배해 빠른 조직안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사측에 연월차 휴가 사용 및 상품판매등 실태조사후 불법적 사례와 강제성이 드러난 부천지사, 서부산지사, 청주지사 등의 책임직에 대한 문책을 지난 4일 요구했다.

또한 이와 함께 전기관에 대해 △연월차 승인 후 근무사례 △월정.보건휴가 미부여 후 반차휴가 처리 △반차휴가 12월까지 일괄처리 △단체휴일강제부여 등에 대해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2002년과 2003년 1월-5월의 전직원 보건휴가, 월정휴일 사용실적을 요구했다.

한편 연월차 소진으로 인한 반차사용은 자의반 타의반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각 기관 실태조사 월정 및 보건휴가 부여의 차이가 커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T노협, 주5일 근무 공동안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의 노동시간단축논의가 임금보전 방식, 휴가일, 적용 시기, 시간의 근무수당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간 견해차이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할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5월말 예정인 노동시간단축안 마련 및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IT노협은 노동시간단축이 동종업계 공동요구가 있을 때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IT노협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진행하기로 지난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다.

현재 IT노협 차원에서는 각 단위노조에서 의견 수렴을 걸쳐 단일안 마련을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대표자 및 정책담당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가 열로 천으로 만으로 온겨레로

6월 13일, 전국은 다시금 촛불의 물결에 휩싸였다. 불평등한 소파(SOFA)협정은 피해당사자인 한국 국민들의 보상은 물론 피해에 대한 언급조차 어렵게 했다. 정부는 자국의 국민을 대변하기 보다는 미군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점점 확산돼가는 국민들의 평화의 목소리, 자주의 목소리는 미선양과 효순양의 죽음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촛불이 열이 되고 열이 천이 되고 만이 되어 거대한 불길은 이루었다. 서울 시청앞 미선이 효순이의 1주기 추모제에서.

지부장에 복무표 확인 지시

매월 중앙본부에 복무표 점검상황 보고

지난 연월차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많은 문제점이 파악됐으나 그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기준법(제71조)과 단체협약(제56조)등에 명시하고 있는 조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본부는 복무표 확인 등 일선지부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시달렸다.

조합은 회사측에 연월차 월정, 보건휴가, 단체휴일등에 대해 원상복구와 함께 불법 및 편법사례가 드러난 3개기관 책임직의 문책을 이미 요구해놓았다. 또한 현장의 지부장, 분회장들에게 단합에 명시돼 있는 조

합원 복수운용지침을 시달리는 한편 6월부터 매월 조합원들의 복무표를 점검, 수합하도록 지시하고 지방본부를 경유, 중앙본부에 보고토록 부당사례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조합원 복무표 사전 확인 사항
- 월정, 보건휴가 부여여부
- 강제적인 연월차(반차포함) 부여 및 반납 여부
- 단체휴일 부여 여부
- 기타 필요사항 등

지방본부명	전체조합원수(명)			복무표 확인 결과(명/%)			지시사항 이행 최저 지부(2)	비고
	남	여	계	월정휴일 부여	보건휴가 부여	연, 월차 반납		
				/	/	명	지부 지부	

복무표 확인 보고양식

KT가 보입니까?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하나된 나라
세계 초일류 기업
세계 IT산업의 선두자

그러나

우리 KT노동자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연월차소진형 주5일근무
객관성없는 평가제도
끊임없는 상품판매
고용불안
몇 년째 정체된 임금
근원없이 떠도는 소문

당당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겠습니다.
2003년 임단협 승리로
KT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인사보수규정 개악 철회/ 임금인상 / 연월차 강제 사용금지 / 단체협약갱신 / 복지기금 및 학자금 해결 / 해고자복직

